

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특수학교 신설 시 수명장, 도서관 등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에 기초한 신(新)특수학교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문화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유치원을 17개 전체 시도 90개로 확대하고,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를 160학급으로 증설하며, 모국어 멘토링도 2017년 서울부터 확대한다. 탈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부모를 위해 진로·진학 교육도 강화한다. 학생 수 감소로 열악해지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구제를 통해 도시근교 농·산·어촌 학교의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지원한다.

셋째,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을 내실화한다. 유아교육 내 실화를 위해 누리과정의 질을 제고하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에 대응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 이상인 학교는 두드림학교로 의무 지정하며, 미달 학생이 일부만 존재하는 학교에도 복합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다중지원팀을 구성한다.

정부는 “날로 심화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주어진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 2017년 주거종합계획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 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2015년 12월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 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보완 계획 등의 신규 내용도 담겼다.

중점 추진과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방식 다양화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다양화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등이다. 이 밖에도 주거복지의 구축 공고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 및 보완 등이 포함됐다.

## ■ 가상통화 긴급대책 마련

정부는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

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첫째,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고,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한다.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키로 했다.

둘째,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셋째,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노동

## ■ 개요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끌어올렸다. 또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등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 ■ 고용노동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 취임

촉발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은 순조롭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조대엽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청와대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조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교수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동영상도 공개되면서 자진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23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 분야의

현안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노동활동가 출신이라 노동현장을 잘 알고,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는 등 관련 직무를 계속 맡아왔던 점이 높이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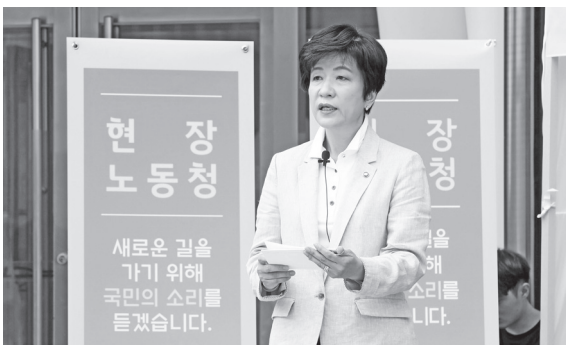
김 후보자는 2017년 8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해 같은 달 14일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이자 고용노동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으로 취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된 뒤 2010년 6월 현재의 명칭과 직제로 확대 개편됐지만 지금까지 여성 장관이 나온 적은 없었다.

### ■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실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 8월 14일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부가 일자리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장관이 되겠다는 뜻을 피력하며 "조속히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해 현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약속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첫 실천으로 8월 18일 부산고용노동청을 방문해 '노동 경찰'로 불리는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역대 장관들의 취임 후 첫 방문지가 노사단체나 현장 사업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김 장관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 실천의 다음 행보는 현장노동청의 설치 및 운영이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노동행정의 관행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국민의 제안과 진정을 듣기 위해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2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장노동청 운영기간인 17일 동안 총 6천271건을 접수·상담했고 이 중 제안과 진정은 3천233건, 현장 노동 상담은 3천28건이었다. 연간 고용부로 접수되는 국민제안 건수의 3~4배가 접수돼 국민들이 노동행정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노동청의 제안과 진정은 최대한 조속하게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은 79.9%가 처리(11월 17일 기준)됐고, 처리 기간은 평균 26.3일로 일반 진정(평균 44.6일)보다 빨랐다. 특히 현장노동청 제호 국민 진정은 접수 다음날 근로감독을 실시해 13일 만에 해결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GST타워 아모리스홀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 중심의 고용노동부」라는 슬로건으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첫 걸음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제시했다. 2017년 대선에서 대다수 후보가 공약한 사항이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 회의를 열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천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천470원에 비해 1천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3천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천540원 올랐다. 이렇게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향상되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으나 영세사업자 부담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에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하면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반 제도개선 요구를 2017년 하반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월 22일과 9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논의과제,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노·사·공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가 제출한 과제 각 3개(6개 과제)의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를 중점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6개 과제는 ①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②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③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이상 노동계 제출) ④최저임금 산업범위 개선 방안 ⑤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⑥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이상 경영계 제출)이다.

위원회는 과제별로 노·사·공익 추천 전문가 각 1명이 참여하고 전체 전문가 18명이 참여하는 TF에서 최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월 22일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TF가 확정된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고, 2018년 1월부터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 '2대 지침 폐기' 및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출범

김영주 장관은 9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2대 지침(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오던 ‘공정인사 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으며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됐던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22일 발표된 2대 지침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 결국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2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됐다.

김 장관은 그간 고용노동행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를 11월 1일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6개월간 운영되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병훈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는 그간의 고용노동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잘못된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7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

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여 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한 인력은 2017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 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이었다.

이후 정부는 10월 25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만4천 명은 연내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은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를 계기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고용부는 12월 29일, 2017년 잠정전환인원 7만4천 명의 83.3%인 6만1천7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고 밝혔다.

### ■ 노조 조직률 4년째 두 자릿수 유지·상급단체 미가맹 조합원 늘어

고용노동부가 12월에 공개한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노조 조직률은 10.3%로 2015년의 10.2% 대비 0.1% 포인트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조합원 수를 전체 임금 근로자 수로 나눠 산출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96만6천 명으로 2014년의 193만8천 명 대비 2만8천 명(1.5%) 증가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대상 근로자 수는 1천917만2천 명으로 2015년의 1천902만7천 명 대비 14만5천 명(0.8%) 늘었다. 조직대상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 수 1천963만5천 명에서 공무원과 교원 중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46만 명을 제외한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로 정점에 오른 뒤 하락세를 보이다 2010년 최초로 한 자릿수인 9.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의 영향으로 10.1%를 기록하면서 10%대를 회복했다. 2012년 이후 10.3%를 유지해 오다 2015년 10.2%로 다소 감소했으며 2016년 10.3%로 다시 소폭 증가했다.

노동조합 수는 6천164개로 2015년의 5천794개 대비 370개(6.4%) 늘었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2천395개(38.9%), 민주노총 소속 368개(6.0%), 전국노총 소속 22개(0.4%), 공공노총 소속 46개(0.7%),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3천333개(54.1%) 등이었다.

조합원 수를 보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2.8%인 84만1천717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이 33.0%인 64만9천327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은 2015년 대비 조합원 수가 1천725명(0.2%) 줄었고, 민주노총은 1만3천78명(0.76%) 늘었다. 미가맹 조합원은 22.5%인 44만2천318명을 차지했으며 2015년의 44만2천603명보다 0.7%인 3천28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미가맹 노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현대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있다.

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108만 명으로 전체 조합원 196만6천 명의 55.3%를 차지해 2015년의 56.7%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노총은 기업별노조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54.2%인 45만6천155명을 차지했으나 민주노총은 초기기업노조 소속이 전 조합원의 82.6%인 53만6천329명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50명 미만 소규모 노조가 전체의 56.3%인 3천439개를 차지했으나 조합원 수는 2.7%인 5만3천696명에 그쳤다. 반면 조합원 1천 명 이상인 대형 노조는 3.9%인 237개에 불과했으나 조합원 수는 전체의 72.5%인 142만5천149명을 차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이 9.1%, 공무원부문 조직률이 67.6%, 교원부문 조직률이 1.8%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교원부문에 비해 공무원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 협약임금인상률 3.6%로 2016년보다 높아져... '60세 정년'에 임금피크제 도입 급증

2017년 12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만534곳을 대상으로 조사된 임금결정 진도율은 84.1%인 8천863곳으로, 1만738곳 중 86.7%였던 2016년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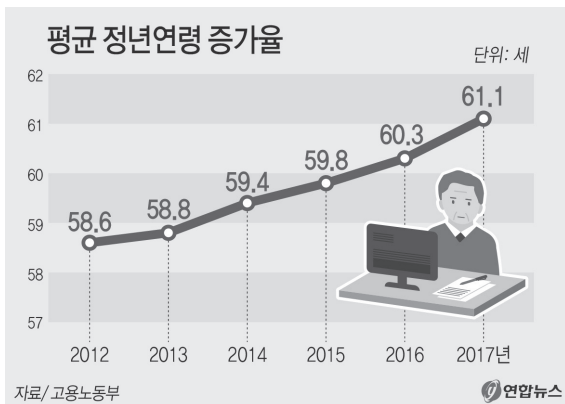
협약임금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3.6%로 2016년의 3.3% 대비 0.3%포인트 증가했고 통상임금 기준 4.0%로 2016년의 4.2%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 ■ 60세 이상 정년제 전면 적용 첫해 사업장 평균 정년 연령 큰 폭 상승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사업장의 평균 정년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61세를 넘었다.

2017년 사업체노동력 조사에서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 연령은 61.1세로 2016년 60.3세 비해 0.8세, 2015년 59.8세에 비해 1.3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에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도'는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53.0%가 운영 중이었다.

이는 전년 46.8%에 비해 약 6.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 ■ 산재 사고사망재해 제조업은 감소, 기타 사업은 증가

2017년 11월 말 현재 산업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884명으로 2016년 동기에 비해 1명(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제조업 사망자가 22명(10.4%), 운수창고통신업 사망자가 10명(13.0%)으로 가장 크게 줄었다. 그러나 기타 사업은 2016년 동기에 비해 24명(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18명(23.7%) 감소한 것을 비롯해 깔림·뒤집힘(11명, 16.4%), 부딪힘(5명, 5.3%) 등에 의한 사망재해는 줄었다. 반면에 무너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명(55.6%) 증가한 것을 비롯해 폭발·파열(6명, 46.2%), 이상 온도 접촉(5명, 166.7%) 등에 의한 사망재해가 늘었다.

### ■ 취업자 수 증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 청년실업률 9.9%로 역대 최고

통계청 조사 결과, 2017년 취업자는 2천655만2천 명으로 2016년 대비 31만7천 명(1.2%)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2014년 53만3천 명, 2015년 33만7천 명, 2016년 29만9천 명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17년 반등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이는 2000년에 현재 기준으로 측정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에는 구직기간이 일주일만 되면 실업자로 분류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구직기간을 4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 11.5%, 여자 8.3%로 2016년 대비 여자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오랫동안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의 문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된다.

2017년 전체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동일했고 성별로 보면 남자 3.8%, 여자 3.6%로 전년과 동일했다.

고용률(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6.6%로 2016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 62.9%를 나타낸 이래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청년 고용률은 42.5%로 2016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는 청년층보다 50~60대 취업자의 증가폭이 컸다. 2017년 60세 이상 25만4천 명, 50대 13만5천 명, 25~29세 2만9천 명 증가했다. 20~24세, 30대, 40대 취업자는 각각 4만7천 명, 6천 명, 5만4천 명 줄었다. 50대 이상과 20대 후반의 취업자 증가는 은퇴 연령의 베이비부머와 에코세대의 인구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1만2천 명, 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만2천 명, 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2천 명, 5.2%)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에 운수업(-2만천 명, -1.5%), 금융 및 보험업(-1만4천 명, -1.8%), 제조업(-1만2천 명, -0.3%)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6만천 명(2.8%), 일용근로자가 3만 명(2.1%) 각각 증가했고 임시근로자



는 13만1천 명(-2.6%)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7만2천 명(1.3%)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5천 명(-1.4%)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2만8천 명, 2.4%), 사무 종사자(9만9천 명, 2.2%), 단순노무종사자(9만7천 명, 2.8%) 등은 증가했다. 판매종사자(-3만 명, -1.0%), 관리자(-2만2천 명 -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만1천 명, -0.7%) 등은 감소했다.

2017년 전체 실업률은 3.7%로 2010년(3.7%)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24세(-8천 명), 50대(-5천 명)에서 감소했으나 60세 이상(1만5천 명), 25~29세(1만2천 명), 30대(6천 명)에서 증가했다.

2017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7만1천 명으로 2016년 대비 2천 명 증가했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육아(-9만5천 명, -7.0%), 재학·수강(-7만8천 명, -1.9%) 등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10만5천 명, 6.5%), 연로(7만3천 명, 3.4%) 등에서 증가했다.

## 보건·의약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2017년 5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의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전면에 내걸고 이전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보건 의료 정책들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막바지까지 보건 의료 기술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쪽에 정책 기조를 맞췄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료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통한 의료보장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정권의 생명이 다한 마지막 순간까지 보건 의료 산업 키우기에 힘썼다. 2월 13일 섬유센터에서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제약사들의 해외진출 컨설팅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으로 신항국 시장의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수입·유통법인을 설립하는 2개 제약사에 기업당 2억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고, 의약품의 국제조달 입찰에 필수적인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획득과 미국·유럽 품질관리기준 모의 실사를 진행하는 비용도 각 2개 제약사에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5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인허가, 기술 이전 등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28일 복지부는 제5차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보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신약개발 등 제약 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점검하고 재도약을 위한 제2차 제약 산업 종합발전계획(2018~2022년)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보건 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빅데이터 보유·

활용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4월 6일에는 향후 5년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할 제12기 보건 의료 기술정책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2017년 보건 의료 기술 육성에 약 1조2천 3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내친김에 의료기기 업계의 신제품에 건강보험 적용을 앞당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최대 280일 걸리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140일 이내로 단축하는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로봇·인공지능·3D 프린팅 등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해 미래 유망 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때 별도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공격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나름의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와 155억원 규모의 '바레인 국가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보건의료관리시스템 수출 계약에 의거해 심평원은 국내 민간 IT 시스템 개발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3년간 바레인에 의약품 유통과 안전 점검, 건강보험 정보 관리, 의료정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의 결과물은 미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2013~2017년 1천986개 사업에 총 1조5천30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중 보건 산업진흥원이 제품 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 의약품 2개)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 생산 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26개(의료기기 24, 의약품 1, 바이오 의약품 1)로 줄어들었다.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지원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을 지원하는 산업 R&D 지원의 경우 대개 제품화 직전 단계를 지원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과가 낮은 데에는 사업 평가위원이 사업 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거나 자문위원들이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를테면 한의약 R&D 전략위원회에서는 유일한 한 명의 위원이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해 무려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냈다.

이 외에도 보건 산업진흥원 내에 다양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구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을 받았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외부 연구진에 진입장벽을 친 채 연구비를 나눠 먹은 셈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장비 산업화 쪽에 중심을 둔 보건 의료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종식과 더불어 막을 내렸다.

2017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내부 로텐더홀에서 5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문재인 시대가 열리면서 보건 의료 정책도 대대적으로 진로를 변경했다.